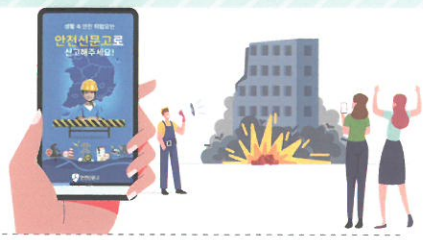
Q7 우리나라는 붕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2019년 4월에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고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시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3개층 이하인 건축 외 모든 건축물 해체는 인허가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 또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광주에서 해체 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8월, 해체공사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체 계획서를 철거업체와 같은 관리자가 아니라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게 하고, 또 감리도 비상주 감리에서 상주 감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했고,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 현장 상시 감시체계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Q8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위해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국민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국민 누구나 해체공사 현장의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앱 기능을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해체 잔재물 낙하, 보행자 안전통로 미설치, 가설 울타리 파손,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해체 공사장 주변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누구나 국민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267만동에 이르는 등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이 잠재적 해체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체 공사 수요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켜보는 눈이 있어야 할 텐데요, 국민 스스로 감리자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안전재해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